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실질적 보상 '패키지 지원' 절실

〈재난지원금+긴급자금 대출〉

코로나19 대응 위한 소상공인정책
"1억 선 대출, 후 피해정산 해아
단체기합식 포괄적규제 지양하고
손실최소화 네거티브방식 전환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 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열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곽수근 중소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정책학회 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도움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대출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입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선 대출·후 정산'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대출을 먼저 해주고 소상공인들이 향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피해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정책학회 회가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이날 포럼 발제를 통해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금액을 획

일적으로 지원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금 대출' 역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적지 않았고, 급하게 지원하다보니 이자가 높아져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금액 대비 액수가 워낙 적어 받는 입장에서 충분치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 등의 한계로 14조3000억원(1차)→7조8000억원(2차)→5조6000억원(3차)으로 차수가 더해질 수록 규모가 줄었다.

긴급자금 대출은 1차때 3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2차엔 한도 2000만원(연 3~4%), 3차엔 한도 1000만원(연 1.9%) 등으로 액수와 이자가 들쭉날쭉했다.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위해선 보상 기준과 비율이 우선 결정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손실 추정 어렵고 자료 부담이 큰 만큼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용'을 손실 하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올해 말에 전멸할 것이다. 현재 정부나 국회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추가 긴급대출은 과감하게 해줘야 한다. 한번에 끝내야 한다. 대출 한도를 적어도 1억원까지 높이고 상환 기간도 10년(3년 거치 포함)까지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7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79만명이 총 18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1

인당 평균 2300만원의 긴급대출이 이뤄진 점을 들어 대출 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최대 77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아울러 신용보증 비율을 100%로 해 은행권에서 신속하게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3년의 거치기간내에 소상공인들이 지난해와 올해의 방역조치로 피해본 고정비용 손실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원리금에서 차감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선 대출지원'에 이은 '후 피해정산'의 경우 보상비율은 금지업종 70%, 제한업종 50%, 일반업종 30%로 하되, 보상한도는 3000만~5000만원 정도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25.1%로 미국(6.3%), 일본

(10.3%), 영국(15.1%), 이탈리아(22.9%) 등 G7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2018년 기준)는 381만개, 종사자 수는 662만명에 달한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큰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른 국가보다 클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 감소가 큰 업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분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발생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 또는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도 '단체 기합식'의 포괄적인 규제를 해 왔는데 이런 방식은 향후 지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기 변수를 고려해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진단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홈쇼핑, 우수 中企 상품 TV홈쇼핑 방송

중기중앙회와 '일사천리 사업' 추진

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홍보를 위해 '2021년 일사천리(一社千里)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사천리 사업'은 광역·도 지자체 및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품을 발굴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홈쇼핑이 2012년 개국과 함께 시작한 '일사천리'는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일사천리로 직접 찾아가 TV홈쇼핑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관련 사업은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하며 85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업을 통해 130여 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14개 광역·도에서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해 선정한다.

지역별 1대1 MD상담회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제품은 담당 상품기획자(MD), 품질보증(QA), 방송심의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TV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올해 사업에 선정되는 상품은 기존 30~40분이었던 방송시간을 50분으로 확대 편성해 매출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 지자체 연계 지원에 더해 '전국 1등 농어촌상품대전', '우수 제조 중소기업 상품전' 등 신규 사업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옥찬 홈쇼핑 대표는 "홈쇼핑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취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수립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일사천리 사업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에 5G분야 최적의 실증환경 제공

중기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5G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을 위한 '5G 밀리미터파(28GHz)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300㎡ 규모로 조성한 테스트베드는 엔터테인먼트·실감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5G 분야 관련 신시

장·신사업을 창출을 위해 밀리미터파(28GHz) 기반의 디바이스와 관련 부품 개발에 필요한 정합성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환경을 제공한다.

테스트베드의 구축과 운영은 중기부, K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한다.

중기부는 기지국, 단말기 등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KT는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과 기술 컨설팅을 수행한다.

운영주체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장비·시설 관리와 5G 관련 공모전,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소진공, 내달 22일까지 총 2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조 분야 소공인 추가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기관 2곳을 3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소공인들에게 조직화와 협업을 지원해 소공인 매출·고용 증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한다.

2013년 당시 처음으로 설치한 특화지원센터는 2월 현재 전국 12곳 시·도에 총 32곳이 자리잡고 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